

미세먼지 성격·유치원 3법 놓고 ‘불꽃공방’ 예상

오늘부터 3월 본격 임시국회

‘재난’ 지정엔 정부차원에서 지원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위한
패스트 트랙 ‘유치원 3법’ 논의

11일부터 본격적인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유치원 3법’과 ‘미세먼지 재난지정’ 등 주요 현안부터 처리에 나선다. 다만 같은 뜻 다른 의견으로 ‘불꽃 공방’의 그림자는 벌써부터 다가왔다.

◆미세먼지, ‘사회재난’ vs ‘자연재난’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본회의 산회 후 1차 전체회의를 연다. 전체회의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해야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어디로 지정할지는 일부 의견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린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에서 ‘미세먼지 5법’을 선정했다. 대부분 사회재난 성격을 띤다.

법안 중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한정에 의원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체가 석탄화력발전소 규정 배출 허용량을 넘어서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업 규제를 강화한다.

반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 40명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예방·대비·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

린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8일 주한중국대사관에 ‘한반도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김승희 의원 등은 법안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다.

여야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안과 함께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혁연기 대란' 끝·유치원 3법 통과할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개혁 연기 투쟁을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학부모 반대와 민주당 압박으로 하루 만에 뜻을 굽혔지만, 3법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불통’에

있다고 지적한다. 당정이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지난 3일 “지난해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국회는 유치원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에 있었다”면서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 논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 지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도한 것 아니냐”며 “제대로 논의도 못한 상태에서 불 보듯 뻔한 것을 만들어놓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을 차례로 열고, 각종 현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28일과 다음 달 5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주객전도... 박영선·진영, 험난한 입각 예상

더민주 ‘적재적소 인사’ 평가
자유한국 ‘총선용 인사’ 비난

지난 8일의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인사에 대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 인사’라는 평가를, 야당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인사’라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각에 포함된 박영선·진영 두 현역의원의 청와대 입성 여정은 험해 보인다.

◆인사청문회 타깃 ‘단골 공격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맹활약하며 ‘단골 공격수’로 불렸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계 전관예우’ 등을 언급하며 매질을 하기도 했다.

앞서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 후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퇴직 후 로펌(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7억여원을 받은 것이 문제돼 낙마했다”며 “황 내정자 역시 부산고검장 퇴임 후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만 원을 받아 정 후보자 사례와 다를 수 없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왼쪽)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각각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몰아쳤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의원이 강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당시 황 후보에게 “법무부장관 끝나시고 다시 로펌으로 가실 것이냐”며 “전관예우 부분은 사법개혁의 핵심 부분이다”고 압박했고, 황 후보는 청문회 내내 진땀을 빼야 했다.

로펌으로 가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도 살아남은 황 후보는 현재 자유한국당 최고 자리에 오르며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

‘황교안 저격수’로 불렸던 박 의원이 황교안 체제 한국당의 ‘송곳 검증’을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친박-비박-반박’... ‘진영’ 바꾸는 진영

진영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로 국회 시험대에 섰다.

4선 중진인 진 의원은 17·18·19대 국회에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에서, 20대 국회에선 진보진영 민주당에서 일했다.

진 의원은 과거 ‘원조 친박’ 인사였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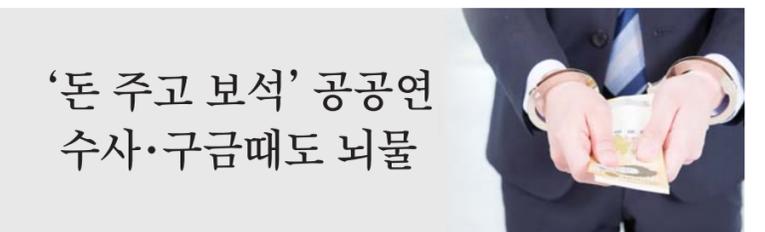
하지만 2013년 복지부장관 당시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견이 갈렸고,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3년 뒤 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당시 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를 겨냥해 “통치를 정치라고 강변하며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빨간 넥타이’에서 ‘파란 넥타이’로 바뀌며 진 의원은 결국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이제 장관 자리에 두 번째 나아간다.

‘대안정당’으로 부상한 한국당이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장관을 맡는 진 의원을 행안부 수장 자리에 임명하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대성 기자



‘돈 주고 보석’ 공공연 수사·구금때도 뇌물

법으로 보는 북한

법에 없는 ‘보석’

판·검사에 뇌물주고 ‘명목상 재판’
구류장 경험 탈북자 83% 폭행당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한에 있었다면 그의 보석은 불가능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보증금 10억원과 논현동 자택 외출·외부 통신 금지 등 조건을 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다.

한국은 2007년 형소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보석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이나 주거지 제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등 9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걸어야 한다.

◆법에 없는 보석, 뇌물로 해결

반면 북한 형소법에는 보석이 없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사실상 보석이 가능하다고 증언한다. 뇌물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의 ‘2017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A씨의 오빠는 2012년 병두(마약)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 앞서 판사와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명목상 재판 일 뿐”이라는 답을 듣고, 노동교화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차 이들에게 뇌물을 준 그는 병보석 처리를 받고 교화소에 수용되지 않았다.

북한에서 구치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은 구류장이다. 우리나라의 구속제도

는 한 가지인데 반해, 북한은 구류구속·자택구속·지역구속 세 가지가 있다. 이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도중 자택 구금 형식으로 보석이 허가 됐지만, 북한에서는 구속 단계에서 질병이나 임신 등으로 피심자(피의자) 구류구속이 적합하지 않을 때 자택에 가둔다(북한 형소법 188조). 지역구속은 유기노동교화형·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 피심자를 예심원이나 재판소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나 거처를 떠나지 못하는 처분이다(189조).

◆수감자 매리며 뇌물 요구

해당 조항만 보면 피의자 인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있는 예심 단계에서 당의 판단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검사의 감시로 법관의 독립된 판단도 불가능하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대할 수도 없다.

수감자 폭행이 빈번한 가운데 수사·구금 단계에서도 뇌물이 오간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보위부 구류장 구금 경험이 있는 탈북자 4명은 지난해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83.3%)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북한 주민 30여명이 2016년 평안북도 신의주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수개월 간 상습 구타에 시달리며 뇌물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연구원 백서에 소개된 탈북자 B씨의 어머니는 2013년 탈북자가 송금한 돈의 수수료를 떼고 현지 가족에 전달하는 ‘프로(%) 돈’ 장사를 하다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 구금됐다. 이곳에서 노트북(모니터 달린 DVD 재생기) 2대를 바치라는 요구를 받은 그는 3500위안과 노트북을 바치고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북한에서는 구속 수감자의 인권이 뇌물로 좌우되는 셈이다.

/이범중 기자 joker@

45년 유지 ‘방산원가 구조’ 뜯어 고친다



45년간 유지해온 방산원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방산원가구조는 무기 등 방산물자에 대해 정부가 방산기업에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었다.

방사청은 10일 “현행 원가방식의 문제점과 방산업계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방산원가구조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초 데이터를 기업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방산원가구조 개편을 목

표로 활동하게 될 방산구조 개선 TF는 방산업체와의 수시 토론회와 민·관·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고 합리적인 원가구조 마련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원가인정 범위를 넓히고 임금인상률을 현실화하는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을 폐지하는 등 이윤 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는 방산기업들의 국내시험 평가비, AS 비용 등 원가 인정 범위 확대요구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형철 기자 captinn@